

# COVID-19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의 대응

(사)한국금융학회 2020년 정기학술대회(2020.6.12) 기조연설문

선우석호<sup>1</sup>

## 목차

- I. COVID-19 출현, 전개와 특성
- II. COVID-19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 III. 뉴노멀의 새로운 모습들
- IV. 정부와 우리 모두의 과제
- V. 금융의 역할

## 들어가며

우선 한국금융학회가 바이러스 집단감염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이 같은 큰 학술대회를 열어 많은 연구자들의 발표기회를 마련한 용기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제게 기조연설의 기회를 주신 신성환회장님과 편집위원님들, 이사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 I. COVID-19 출현, 전개와 특성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심각한 폐염증상을 일으키며 세계를 긴장시키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COVID-19는 2020년 1월말 한국에 전이되자마자 순식간에 대구, 경북지역에 5천여명의 확진자를 만들면서 이지역을 집단감염의 분수처로 만들었다. 당국은 극단적인 봉쇄나 폐쇄조치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시민이

---

<sup>1</sup>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전 한국금융학회 회장

나 도민들은 방콕 하면서 길거리를 배회하지 않았고 상당한 두려움 속에서도 이 지역을 탈출하거나 물건사재기를 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다. 민간 기업들은 연수원 등을 임시병실로 내놓았고, 타지역의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대구로가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민간 제약사들은 우선적으로 진단시약을 개발하여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일본, 유럽, 미국들이 차례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감염자를 양산할 때 우리는 신속진단, 확진자 동선추적 및 음압치료 등 방역체계를 정비하고 정확한 정보로 국민참여를 이끌어내면서 6월 초 현재 누적확진자 만천명, 91%의 완치율과 하루 신규확진자 평균 40명 수준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향후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거리 지키기, 확진자 동선파악, 다중시설이용 자제, 자가격리자 관리가 잘 작동하고 그리고 철저한 해외유입자 관리가 이뤄져서 2차 대유행을 막으면서 2~3년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온 국민이 그 안에 백신<sup>2</sup>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한국민은 개인의 자유를 일부 내준 대가로 다른 나라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동의 자유, 일할 수 있는 자유, 소규모지만 만남의 자유, 외식할 수 있는 자유 등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한국-격리방식(K-Quarantine)으로 한국은 물건 잘 만드는 나라에서 소프트도 강한 나라로 알려지는 첫번째 사건이 되었다<sup>3</sup>.

그러나 이 같은 한국의 성과는 지구 전체의 상황에 비하면 조그마한 소식일 뿐이다. 폐를 섬유화 시키고 어린이에게는 혈관합병증을 일으켜 환자의 2~15% 정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무서운 괴질 바이러스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아직 모른다.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로 미루어볼 때 박쥐나 천산갑, 들쥐 등의 숙주에 살아남기 위해 자연 발생적인 변이로 탄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번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숙주를 오래 살리면서 무증상 또는 경증 상태에서도 감염자의

---

<sup>2</sup> 백신개발은 임상 3차를 모두 거쳐야하기 때문에 빨라야 3년걸릴것으로 평가. 또는 지속적인 RNA변이로 인해 아예 백신이 안 나올 수도 있다 함. 에이즈, 사스, 메르스 모두 백신 없음. 인류 역사상 천연두 외에는 바이러스 백신 개발(1980년)한 경험 없음.

<sup>3</sup> 이점은 향후 국가브랜드 이미지와 국가 신뢰도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포말로 제3자에 전염시킨다는 점이고 이 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특성이다. 포말에 섞여 사람 코에 들어오면 COVID-19같은 RNA바이러스는 돌기(spike)를 자르는 변이로 코점막에 쉽게 침투 후 증식하게 된다. 이태원에 들른 학원강사로 비롯된 전염이 2주만에 7차 감염을 일으킨 것을 보아도 이 바이러스의 변이능력과 전파력은 가공할 만하다. 1차 감염마다 3명씩 전파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명이 2주만에 2,000명의 확진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sup>4</sup>. 지속적인 변이로 보아 각 지역에 전염된 코로나바이러스는 모두 다른 유형이다<sup>5</sup>.

그간 인류를 위협한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 중국, 미국에 국한되어 발생하다 후반부에 대륙을 건너간 것과 달리 전세계가 3개월만에 모두 감염되었다는 사실로 보아도 이번의 바이러스는 과거의 것과는 다르다. 6월7일 현재 통계를 보면 700만명이 발병해 40만명이 사망했고, 매일 12만명이 새로 병에 걸리고 4천명이 사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 브라질, 러시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독일, 페루, 터키, 이란, 프랑스, 캐나다, 중국 순으로 발병자가 많다. 일본을 제외한 G7국가 모두가 앞순위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중국, 일본, 한국, 홍콩, 베트남, 대만 등은 인구대비 확진자 수와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위 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다<sup>6</sup>. 이들 두 그룹 간에는 국가가 국민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국민들이 정부 방침에 순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태 초기와는 달리 요사이 서구선진국 국민들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와 이동 및 모임통제 등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면 2021년말 전에는 모든 국가가 확진자 조절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

<sup>4</sup> 3의 7제곱은 2,187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집단감염의 위험을 설명하면서 방심하면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이” 전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표현한 바 있다.

<sup>5</sup>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가 증식을 거듭하면서 1년 동안 획득하는 변이는 26개로 추정됨.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는 A·B·C 3 유형으로 변이가 일어나며, A는 미국·호주, B는 아시아, C는 유럽 지역에서 주로 발견됨.

<sup>6</sup> <http://ncov.mohw.go.kr/>의 국외발생현황 참조.

빠른 변이와 빠른 시일내에 통제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은 백신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100여종의 백신은 대부분 초기 바이러스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 중이라 개발되어도 약효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2년 내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임상실험 등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나 개발 후 수요가 크게 줄어들 백신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민간회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sup>7</sup>. 백신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제아래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파급력은 크게 줄겠지만 풍토병으로 남아 인류와 함께 할 바이러스로 남을 공산이 크다.

또다른 현상으로는 팬데믹을 일으킨 대변이-바이러스 출몰 역사를 볼 때 2000년대들어 그 발생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는 점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2000년 이후 팬데믹급 바이러스확산으로 사스(2002~2003), 신종플루(또는 스와인플루, 2009), 에볼라(2014~2016), 메르스(2015)를 들 수 있는데, 요약하면 2000년 이후 평균발생주기는 약 4년인 셈이다<sup>8</sup>. 20세기 후반까지에 비하면 발생빈도가 매우 짧아진 셈이다. 주기단축의 원인으로는 공해유발(emission)로 인한 기후온난화와 세계화진전에 따른 빈번한 인구이동 등을 들 수 있다. 만일 COVID-19같은 것들이 향후 4년마다 발생하여 매년 세계경제를 1~2년간 무력화시킨다면 우리의 삶과 경제는 피폐화될 것이고 인류전체에는 21세기 가장 큰 재앙으로 기록될 것이다.

## II. COVID-19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사태는 의학기술이 크게 발달한 21세기에선 선진국을 불문하고 인류전체를 전염에 대한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

<sup>7</sup> 이런 이유로 천연두 외에는 인류가 개발한 바이러스 백신은 아직 없다. 다만, 정부가 R&D비용을 상당부분 지불하여 울여름 즈음에 백신이 개발된다면 유효한 백신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

<sup>8</sup> 사스(2002~2003), 신종플루(또는 스와인플루, 2009), 에볼라(2014~2016), 메르스(2015), COVID-19(2019~2021?). 참고로 사스와 메르스는 COVID-19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이다.

지금 마스크쓰기, 비누로 손 씻기, 사회적거리, 자가격리, 확진자 등과 같은 생활 규칙과 용어를 모르는 지구상의 인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경제에 끼친 파급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Shut-down이 7월까지 지속될 경우 -7%의 경제성장<sup>9</sup>도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타격이 적은 나라인 한국도 올해 -0.5%면 그나마 선방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5월 초 시행된 서베이에서 미국 IB 500명들은 GDP곡선이 매우 완만한 U-커브를 그릴 것이고 내년 하반기나 되어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정리하면,

첫째 세계화나 빈번한 왕래는 부와 번영을 가져왔지만 재앙도 함께 가져다준다는 점이다. 이번의 사태로 가족을 잃은 사람 뿐 아니라 그동안의 쌓은 부를 모두 잃은 기업들도 많을 것이다. 해외여행객과 글로벌 공급사슬은 과거의 규모보다 크게 축소되고 다시 옛날의 상태를 되찾지 못할 것이다. 이번의 사태는 수요와 공급이 한꺼번에 무너진 사태로 해외에 사업체를 둔 기업들은 또다시 이런 사태가 올 때를 대비해 공급망을 언제나 작동 가능한 형태, 즉 국내에 두려는(re-shoring)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둘째로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개인들이 상당분의 자유를 정부에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의 사태에서도 아시아 국가들, 즉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나라들이 국민들을 잘 지켰다. 빨리 이겨냈기에 포스트-코로나 시기에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개연성이 커졌다. 이런 통제의 장점들이 지나치게 부각되면 전체주의 성향의 큰 정부 출현이 자연스럽게 꿈틀 것이다.<sup>10</sup>

---

<sup>9</sup> 2차 대유행이 올 초겨울에 올 경우 -8.1% 전망.유럽은 -5.6%. 자료 18개국 세계주요 경제단체 AD-1년 경제전망, 2020.6.

<sup>10</sup> 이런 정부들은 원래 인기가 없기 때문에 인기영합(populism)적인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이나 재산가보다는 절대다수인 군중의 환심을 얻고자 재정을 방만하게 쓸 공산이 크다.

세째로는 국민건강과 경제살리기는 상호교환관계(trade-off)에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전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봉쇄(lock-down)나 폐쇄(shut-down)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는 경제활동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다<sup>11</sup>.

넷째로는 건강문제로는 국가간 공조 잘 안된다는 점이다. 각국은 일방적인 통보로 다른 나라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취했다. 각국이 서둘러 시행한 마스크 수출금지조치도 마찬가지로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국가 정책 중에 자기나라 국민 건강보다 우선되는 정책은 없다. 이런 조치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와 사뭇 다른 양상이다. 건강문제에는 자국우선주의 밖에는 없다.

다섯째로는 경제적 약자들이 더 많이 전염되었고 더 많이 사망했다는 점이다. 또한 요양원 등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노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일용직들은 매일 일에 나가야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염에 노출되기 쉬웠고 평소 건강도 보살피지 못하는 형편인데다가 높은 의료비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해 이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세대별로는 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다. 또한 특히 미국은 흑인, 유럽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인종차별논쟁으로 이어졌다<sup>12</sup>. 노숙자나 노인들이 너무 많이 사망하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가 복지비용을 줄이려고 일부러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 섞인 시각도 있었다.

여섯째로 디지털기술의 위력이 돋보였다. 디지털 앱기술과 확진자동선자료 등 실시간데이터 확보는 의료체제에 더하여 방역효과에 큰 효과 있음을 증명하였다. 대전염시대에 정상생활로의 복귀도 디지털기술로 가능했다. 기존의 기능을 대체해주는 언택트(contact free) 방식의 회의, 의료, 교육, 쇼핑, 금융서비스 모두

---

<sup>11</sup> 미국과 브라질의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설불리 나섰다가 국민건강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sup>12</sup> 코로나-19로 모두 민감했던 시기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은 '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시발점이 되고 전 미국과 유럽의 인종차별반대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에서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구환경, 건강의 중요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하늘이 맑아졌으며 감기환자도 사라졌다. 인도에서는 700km 멀리 히말라야가 보였고 서울의 하늘도 어느 때 같으면 매연과 황사로 뿌였을 봄 하늘이 청명한 코발트색으로 시민들을 위로하였다. 인간이 소비와 왕래를 확 줄이면 지구는 깨끗해진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여 입증한 셈이다.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니 감기로 고생하는 이도 없어졌다. 아울러 집에서 오래 머무는 동안 건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소비, 부와 같은 탐욕에 젖어 살던 우리들에게 통제기간은 이대로 가면 지구나 그 안에 사는 우리가 언젠가 결판나지 않겠느냐, 정말 소중한 것을 잊고 살고있지 않았던가 라는 자성의 시간이 되었다.

### III. 뉴노멀의 새로운 모습들

이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19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라는 낙관주의 아래 조만간 과거 원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회귀하지 않고 다른 양상으로 정착되어 새로운 규범(new normal)을 형성할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코로나바이러스-19급의 바이러스 대유행이 와도 항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의료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 ② 글로벌 가치사슬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던 공급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일부는 국내로 회귀하고, 일부는 전염시대에도 작동가능한 체제로 재구축하게 될 것이다.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축소될 것이다.
- ③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이다. 늘어난 부채에 대비하여 젊은 층은 소비를 줄이고 빚을 갚거나 저축을 늘릴 것이다. 한편 도래한 초저금리 시대

에 젊거나 부유한 계층은 고위험 투자를 늘리고, 노년층은 체력증강과 미래에 필요한 의료비충당을 위한 안전투자와 보험투자를 늘릴 것이다.

- ④ 자본주의, 자유경제에 대한 불만이 이를 대체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탄생시킬 것이다. 위기시에 소득 하위계층은 굶으면서 죽어 나가고, 중산층은 어려운 일을 도맡으면서도 실업, 주가폭락 등으로 힘들어하는 데, 막상 상당수 부자들은 정부와 통화당국의 무제한 돈 풀기로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sup>13</sup>. 이 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라는 관점에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자본주의를 크게 수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 ⑤ 비대면(언택트)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정착화될 것이다.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는 오프라인을 완전 대체하기 보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서로 보완관계를 이루되 어떤 부분은 상호 경쟁하게 될 것이다. 경쟁상황의 오프라인은 즐겁고 그리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손님 찾기 어려운 서비스가 될 것이다. 온라인이 AI기술과 접목되면서 오프라인과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오프라인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기능을 수행하는(multi-purposed) 복합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sup>14</sup>.
- ⑥ 마지막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 전염병 대응에 대한 전 국가적인 합의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더 힘을 받을 것이다.

뉴노멀의 모습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논의되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왔던 것 들이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19는 이의 진행속도를 가속시키

---

<sup>13</sup> 우월한 정보력과 여유현금으로 폭락한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sup>14</sup> 예로 대학의 경우 지식전달 차원의 강의는 상당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될 것이다. 이것이 AI 기술을 이용하여 진화하면 지식전달 면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경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의학수술 강의를 대표적일 것이다. 다만 교육의 가장 핵심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교육은 필수적이다. 오프라인 수업은 지식전달 뿐 아니라 삶의 지혜도 가르치는 다기능적인 것이어야 한다.

고 있는 것이다. 매우 세계. 가속페달을 힘껏 밟듯이 말이다.

#### IV. 정부와 우리 모두의 과제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1차 시기에 나름 잘 대응하고 있다. 특히 방역 대책 및 실행부분은 그렇다. 그렇다고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경제상황을 보면 낙관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

최근의 우리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세계경제가 저성장하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운 보호주의를 선택할 것이다. 여기에 국가 간의 공조조차 안되고 미중간의 마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의 존도가 높은 한국은 처절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미 4월 경상수지가 수출물량감소(-12.6%)의 충격으로 -31.2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2011년 1월이 후 최대폭이다.

둘째는 우리 기업의 재무적 상황이 녹록치 않다. 지난 2~3년간 대기업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되어왔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이후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중견기업들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대출이 수십조원에 달했다. 금리가 낮아 당장 부도가 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 갚아야할 돈이다. 향후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세째로 기업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부정책도 큰 장벽이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의 경직적인 운용,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들, 수시로 바뀌는 정부정책들, 빈번한 시장개입, 대기업 총수를 죄인으로 보는 사회적 분위기 등 이런 풍토에서 기업이 신바람 나게 도전하고 혁신할 리 없다. 이런 어려움을 현실로 수용한 상태에서 정부와 기업이 할 일 그리고 경계해야할 일을 정리해본다.

다음으로 세계경제가 코로나-19사태를 맞아 그 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전망해보자. 치료제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여러 형태로 나올 공산이 크나, 백신 개발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남미나 아프리카를 경

유하여 올 겨울 다시 북반부에 2차 감염이, 내년 봄에는 3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인구대비 완치자와 면역보유자의 수가 턱없이 적기 때문에 개연성이 크다. 대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세계 경제는 파장은 다소 줄겠지만 반복적으로 출렁일 것이다. 최근 컨설팅기업인 BCG가 500명의 IB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완만한 U자를 그리되 대유행이 일어날 때마다 파도를 치지만 상당기간후에도 추세선을 따라잡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것을 2021년 말까지의 시나리오라 가정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짜 보아야할 것이다.

첫째, 향후 발생가능한 대규모 전염방지에도 작동할 수 있는 방역시스템을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정비하고 전염병 전용 예비 의료시설과 같은 새롭게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롭게 정비된 소프트웨어 및 하드시스템을 매뉴얼화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정교화하는 국가차원의 방역시스템을 대학, 연구소, 제약사 등과 연계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진단-치료-백신에 이르는 제약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부분의 혁신적 사고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이 같은 혁신이 이뤄지도록 포지티브시스템 형태인 규제 시스템을 네가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sup>15</sup>. 의료체계 정비와 아울러 공해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sup>16</sup>들을 취하여 깨끗한 나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성과를 거둔다면 과거 새마을운동이 그랬듯이 이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 무료로 공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세계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는 재정의 문제이다. 코로나 사태 후 세차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840조 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전년말 대비 5개월여 만에 111조

---

<sup>15</sup> 바이오산업에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 개인별 지놈치료를 하려해도 비식별정보를 바탕으로 마련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인별 맞춤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외에 원격의료, 줄기세포연구 등이 대표적인 규제 영역이다. 벤처사업가가 연구개발하다가 형사처벌 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

<sup>16</sup> 예로 탄소배출이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전기자동차용 충전소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는가, 안전도 높은 원전건설은 장려하는 원전 정책의 재고 등이 이에 속한다.

4,0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더하여 4차 추경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sup>17</sup>. 야당도 기본소득제도<sup>18</sup> 도입을 들먹이고 있고, 국민의 62%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이러다가 몇 년 내에 금리가 오르기라도 하면 세수로는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유혹이 크겠지만 자제하여야 한다. 오히려 재정준칙을 세우고, 나아가 2016년 정부가 스웨덴의 재정운용을 모델로 하여 도입하려했던 재정건전화법의 유사입법을<sup>19</sup> 추진해야할 시점이다. 장기침체에 대비하여서도 재정 건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쓸 카드를 너무 빨리 소진하면 나중에는 정부가 쓸 카드가 없어진다. 일본의 장기침체의 사례에서 피할 것은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로 기업인에 기를 살려 코로나사태이후 한국에 찾아올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1)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부가가치산업인 언택트, 원격의료, 빅데이터활용, 바이오, 원격교육 등에의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일이다. 20~30대가 원하는 일자리는 혁신 산업과 부가가치 높은 서비스 산업에서 창출된다. 금융산업도 그동안의 이해관계자 틀에서 짠 규제를 재고하여 소비자 중심

---

<sup>17</sup> 2020.6.8 현재 3차 35.3조규모의 추경후의 국가채무는 840.2조원은 GDP 대비 43.5%로 2019년 39.4%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국가간 비교에 사용되는 부채는 공공기관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대략 47.5%가 된다. 향후 추경 후 세수부족으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2021년 50%를 넘길 공산이 크다. OECD평균보다 아직 낮다고 하지만 여기에 가계부채, 기업부채 합산한 총부채는 2019년 4,540조 원으로 GDP대비 237%에 달하고 이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254%와 유사하다. 인구감소, 복지수요, 저성장, 국민연금 고갈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부채증가는 피해야 한다.

<sup>18</sup> 2016년 스위스에서는 국민의 77%가 국민투표에서 반대하여 부결시켰고, 이전 핀란드에서는 2년 간 시행했던 기본소득 실험을 실패라 단정하고 폐기했다. 부결과 실패의 원인은 이의 자원 마련을 위해 그동안 누려왔던 다른 복지를 대폭 축소해야 하는 점과 국민들이 일할 인센티브를 가지지 않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sup>19</sup> 국가채무총량을 GDP의 45%, 연간 관리재정수지적자를 GDP의 3%내로 묶는 법안이다. 선심성 재정집행, 즉 재정 포퓰리즘을 막고 혁신기반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다.

의 그리고 경쟁을 촉진하는 새판으로 규제를 재조정해야 한다.<sup>20</sup>

2)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활력 불어넣어주어야 한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의 탄력적인 운용이 긴히 필요하다. 특히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하는 IT업종 종사자, 개발초기단계에 소규모이지만 엄청난 인력투입이 요구되는 벤처기업 기술자, 연구소, 결산기의 회계사, M&A, 해외증권거래 등에 종사하는 증권사의 IB들, 변호사 등에 대한 제한은 상식적이지 않다. 회사가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직원도 더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하는데 이를 국가가 좌악시하면서 못하게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의 고충을 청취하여 직업성 특성을 고려하여 주단위를 월이나 분기단위로 조정하여 52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 기업인들이 가장 불편한 것은 정부의 시장개입과 자주 바뀌는 정부정책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의 투자를 고려하다 포기할 때 드는 2,3번째 요소이다. 물론 제1의 요인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회사가 어려워도 해고를 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기업이 지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해외에 나갔다 회귀하는 한국의 기업들도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지원제도, 정권 바뀔 때 마다 바뀌는 기업관련 제도, 세제 그리고 노사문제 그리고 담보위주의 대출제도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기업들의 회귀 현상, 즉 re-shoring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후 빈부격차와 개인 및 기업부채 부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실업으로 소득이 없어 단기성 부채를 돌려막기 식으로 일으킨 수백만명의 일용직과 임시직들, 코로나사태 과정에서 (권리금보존 등을 위해)과다한 부채차입으로 무대출에도 버텨야 했던 자영업자들, 대출/채권만기연장 또는 추가대출로 부도를 면한 많은 기업들(특히 관광, 항공, 운송, 요식업, 관광

---

<sup>20</sup> 예로 생명보험 채널은 오래전 삼성, 대한(현 한화), 교보생명 3사의 입장을 고려해 방카슈랑스에 여러가지 %판매규제를 두었는데 이는 소비자의 권익과 무관하게 GA의 비대화를 유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경쟁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 가게 등)은 이후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소비위축에도 상당 분 기여할 것이다. 이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모럴해저드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기능에 준하여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제도 정비와 구축이 필요하다. 예로, 당분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Z-세대에 대한 미래 취업을 위한 (IT & AI, 데이터공학, 바이오, 언택, 의료/재활 등에의) 재교육 지원제도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신속한 회생, 청산, 업종전환을 위한 fast track을 구축해볼 수 있겠다.

2018년 촛불집회의 위력에 힘입어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사람이 살 만한 나라, 즉 국민 모두 존중받고 풍요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북한과 차원이 다른 친근한 관계를 형성해 전쟁을 막으면서 통일기반을 다진다는 큰 전제아래, 과거 적폐를 청산하여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저소득층에 세금을 나눠주어 그들로 하여금 소비를 주도하여 이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기조로 삼았고, 공기업 비정규직을 거의 정부 강제로 정규화하고<sup>21</sup>, 기존 근로자들의 정년과 임금피크진입 나이를 뒤로 미루었고, 국내와 해외 근로자를 구분 안하고 최저임금과 주52시간을 업종, 지역, 사업적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일시에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한편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보는 부동산가격을 잡겠다 공언하고 한달이 멀게 새제도를 발표하였고 에너지수요 공급에 대한 섬세한 분석이 없이 임기 초기에 원전을 포기하는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재정에 의존한 방식으로 추진하였는 바, 이는 공무원 수를 계속 늘려 나가는 방식과 단기적인 노령 일자리를 대폭 증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고용율은 분명 개선되었다. 그러나 젊은 이들이 철밥통 공무원자를 얻기 위해 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기업보다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시에 몰려들고, 노인들도 질 낮은 노동에 시달리는 병폐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 선거를 앞둔 여당의 입

---

<sup>21</sup> 취임초기 인천공항공사를 깜짝 방문하여 '여기계신 비정규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여건이 어떻든 간에 밀어붙이겠다는 통치자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은 하되 임금은 모회사와 차등을 주는 방식으로 일 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회사 직원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한다고 강력 투쟁하고 있다.

장에서는 그들이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재인케어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영역을 크게 늘렸다.

이들 대부분의 경제정책들은 어느 정권이나 국민의 인기를 누리하고자 도입하고 싶은 포퓰리즘정책들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상당한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유지가능한 정책들이다. 예로 국가 전체에 혁신이 맹렬히 진행되어 잠재성장률이 높고,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시현하고, 고용수요가 높으나,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작동 가능하다. 2년전에도 그런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 당시 잠재성장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국책연구기관들도 요소생산성하락으로 향후 성장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 담은 보고서를 내기도 하였다. 지금은 더욱 어려워져 있는 상태이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에 홀대를 받으면서까지 정성을 드린 대신 그동안의 혈맹이라고 믿는 미국과는 소원해지고 경제적인 동반자격인 일본과는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거의 적국과 같은 관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주변국가와의 대외관계 악화는 국가안보, 경제협력, 금융안정<sup>22</sup> 등에 나쁜 영향을 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대로 기업의 활력이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노동, 조세, 에너지 등 분야와 가격 간섭이 극심한 부동산 분야 등 정부정책이 제대로 작동 안 하거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회복에 방해하는 여러 제도들은 과감히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 5법이나 데이터 3법 개정 등은 환영할 만하나 시행령의 제정추세로 볼 때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

<sup>22</sup> 미국과 관계악화는 안보리스크를 올리고, Super 301조 발동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킴. 일본과의 관계악화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로 주요산업의 공급망을 교란시키기도 함. 이들 기축통화국과의 관계악화는 외환위기 시 통화스왑 등을 거절당함으로써 금융안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 V. 금융의 역할

이번 코로나19사태는 1997년의 아시아외환위기나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와 달리 전염병에 의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나 금융의 문제는 아니다. 전염병문제만 완벽하게 제거되고 단기간에 과거로 회귀 된다면 한번의 쇼크로 끝날 수도 크다. 그러나 현재 1차 wave의 고점에 머무르고 있고<sup>23</sup> 11월쯤 2차 wave가 올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에서는 향후 2년 정도는 등락이 있겠지만 경제충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장기간 지속될 때 경제충격의 상당분은 구조적으로 남아 오랜 기간 유지될 공산이 크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만 봐도 초저금리, zero 인플레이션, 출렁이는 유가, 정부재정 악화, 기업과 개인의 부채 증가, 빈부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자영업자들의 줄 파산 등 난제가 쌓여 있다. 이들이 복합적으로 일으킬 문제들을 중앙은행과 금융위, 재정부 등이 과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심히 우려된다. 결론적으로는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틀을 중앙은행과 정부가 만들고 기업들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수익사업을 일으키고 부를 축적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부단히 만들어내야 한다. 민간에 부가 쌓이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생성한 넉넉한 세수로 복지 및 빈부격차해소를 위한 재정지출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이번의 위기가 큰 상처없이 넘어갈 것이고 이후 닥쳐올 또 다른 위기에도 견뎌낼 수 사회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다.

우선 (명목)초저금리는 저축자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인센티브가 없어 현금 보유를 늘릴 것이고 이는 곧 돈의 유통이 안 일어나는 유동성함정을 일으킬 것이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불리한 입장에서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고 민간은행들은 NIM의 저하로 수익성악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가 늘어나야 정설이지만 수요감소로 투자 리스크가 큰 현실에서는 투자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자산가격을 올

---

<sup>23</sup> 2020년 6월 초 현재 러시아나 브라질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느슨해진 틈을 타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려 젊은 층의 주택대출 이자를 올리고, 금융투자자들은 의미 없는 저축보다는 고 위험투자처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과정 2년 동안 누적될 개인과 기업의 부채는 엄청난 수준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20년 1분기 이미 GDP의 80%수준을 넘었고 2년 후 100% 가까이 된다고 가정할 때 (-)성장률 상황에서 과연 우리 경제가 이런 부담을 감내할 수 있겠는가 우려가 된다. 또한 기업의 경우도 향후 코로나19 사태 과정 2년 동안 만기 연장과 추가대출로 연명할텐데 매출신장이 크게 없는 대부분의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좀비기업화되었을 경우<sup>24</sup> 구조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일시에 할 경우 경착륙의 문제는 없는가 우려가 앞선다. 개인 및 기업 구조조정에는 IMF외환위기때도 그랬지만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폭증하는 정부지출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정부부채의 지속적인 발행이 자칫 금리구조식을 상향이동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2년내 정부부채가 크게 늘 것이고 세수결손과 부채이자를 부채발행으로 계속 막으려 한다면 재정건성성 악화와 더불어 국채금리는 상승하여 금리구조식 전구간의 금리수준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금리구조식의 상향 조정은 모든 금리의 상승을 유도해 부채가 많은 젊은 층과 수익성 낮은 기업에게는 독배를 마시게 하는 것과 같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경험했듯이 향후 더욱 벌어질 민간부문에서의 빈부격차와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격차 문제를 금융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하는 가이다. 이는 흔히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증세와 대기업에 법인세 과다부과 등과 같은 재정정책으로 다루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긴 쉽지 않다. 부자나 대기업이 돈 버는 수단을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런 이전방식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세원을 아예 잃어버리는 셈이다. 쥐 잡으려다가 장독깨는 식이 되는 것이다. 이보다는

---

<sup>24</sup> 이자보상배율 1미만의 기업 중에서 번 돈으로 빚 이자도 갚지못해 계속 빚을 내어 돌려막기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기업.

정부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사활과도 연결된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이뤄져야 한다. 금융은 보조나 지원이 아닌 금융 특유의 ESG활동을 통해 이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sup>25</sup>.

다음은 초저금리, zero 인플레이션, 출렁이는 유가, 정부재정 악화, 기업과 개인의 부채 증가, 빈부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자영업자들의 줄 파산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 이에 대한 대처방식이다. 최근 중앙은행이 단행한 기관을 통해 자금경색을 풀고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춘 것은 단기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부도를 막고 금융안정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앞서 우려한 대로 한번 더 금리를 내려 0%의 초저금리로 내릴 경우 유동성 함정에 유의하여야 하고 이렇다 미국경제가 먼저 살아나기라도 하면 capital flight가 크게 일어나면서 외화금리 스프레드가 폭등하고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등 초기 단계의 외환위기로 변질 수 있다. 이는 수입물가를 올려 물가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금융안정을 도모할 때 금융위원회, 재정부 등 정부와의 소통하여 상호 보완적인 정책조화를 꾀하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위기시의 소통채널을 정례화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의 도움으로 정부보증 회사채매입도 활성화하는 등 보다 다양한 수단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금융안정 아래에서 민간이 자금경색으로 인한 흑자도산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좋은 사업아이디어를 사업화 하려할 때 자금공급이 원활하다면 선순환구조로의 복귀가 속도를 낼 것이다.

민간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비대면 서비스 요구에 발 맞추기 위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속도를 더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의 사태에 피해 받은 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늘려야 한다. 또한 사업의 발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초저금리시대에 금융기관이 살길은 투자자에게 위험대비 고수익 상품을 찾아 고객에 연결해주는 것이다. 담보대출관행에서 조금 탈피하여 신용대

---

<sup>25</sup> 맨 뒤 문단에서 ESG와 함께 금융의 소득격차해소 활동을 다룬다.

출의 영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로, 창업자 특성별로, 사업별로 다각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담보 없어도 좋은 아이디어면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대출 풍토를 키워야 한다.

아울러 초저금리 시대에 늘어나는 고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잘 선별하여 고객의 위험대비 과도한 손실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투자자들도 고수익기회를 노리고 과감히 투자하지만<sup>26</sup> 연금, 공제회, 보험사 등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금리상품보다 예상수익률이 높은 비유동자산, 예로 대체투자를 무작정 늘리고 있는데 포스크-코로나 이후에도 그 가치가 유지되는지 의문이다. 특히 해외의 상업용부동산과 에너지 인프라 등이 우려의 대상이다. 문제는 회계장부에 매입가로 평가하게 되어있어 가치하락을 하더라도 투자자는 알 수 없다 라는 점이다. 더구나 평가가 제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자가 자신에 대한 성과평가 악화를 막기위해 처분을 뒤로 미루는 모럴해저드가 일어난다. 이런 비유동자산에 대한 평가와 리스크관리는 코로나로 상황의 진전으로 가치가 더 추락하기 전에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 차원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다.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코로나19사태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변동성은 그 어느때보다 컸다. 파생상품 -> 증권-> 대출 순으로 손실 및 부실이 발생하는 데 중앙은행과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의 조기 집행으로 자금경색은 오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주요 은행들의 연체율은 크게 요동치지 않았다<sup>27</sup>. 파생

---

<sup>26</sup> 코로나19 시기 주식가격이 심한 등락을 보일때 개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군집하여 외국투자자와는 반대방향으로 거래를 하여 평균 15%정도 수익을 얻었다. 과거 외세에 항거했던 동학군의 이름을 따와 동학개미라 불리긴 했는데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고수익지향 젊은 층이라 보는 게 적절할 듯하다. 2019년말 대비 코스피 상승률은 6/8 현재 7.9%로 다우의 8.5%, 니케이의 5.5%, 상하이의 3.6%과 비교해보았을 때 한국의 주가가 미국주가와 더욱 연동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주식 매수/매도 활동이 주가전체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sup>27</sup> 주식시장 상황이 현재 경제의 어려움과 괴리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시각도 많다.

상품의 경우는 파생상품가격의 급변으로 단기간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sup>28</sup> 향후 증권사 뿐 아니라 은행, 보험, 여타 기관투자자들과 코로나19 이후 초저금리 아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늘어난 변동성으로 인해 파생상품관련 투자에서 많은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금융기관들은 투자자들에게도 보유 투자포트폴리오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AI에 의해 또는 분석가에 의해, 국내 및 해외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제공하여 투자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를 줄여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들은 코로나19 이후 대두되는 사회적 책임과 환경투자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코로나-19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줄이는 시기가 아닌 본격적으로 늘리는 기회로 사용하여야 한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낮은 보험료로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코로나19 사태이후 자금사정이 어렵지만 잠재성 있는 많은 중견기업, 수출기업, 자영업자들을 무담보로 지원하고, 일용직에서 일자리를 잃은 많은 Z-세대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 특화된 상품개발도 해야 할 것이다<sup>29</sup>. 이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이미지개선 차원이 아닌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한편 지구온난화를 위한 금융수단의 개발도 확대해 나가야한다. ESG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을 ESG활동에 모범적인 회사에 우대금리 대출을 해주는 활동, 자산운용회사는 높은 ESG점수를 받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펀드에 편입하는 등 ESG활동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sup>28</sup> 예로 지수연동 ELS펀드에 Loss-cut을 위해 풋-매도 청산(반대매매) 과정에서 급격한 풋가격 상승으로 미수가 발생하여 천억원대 이상의 손실을 증권사 등이 부담하는 사태들이 발생하였다 1개월전 4.3엔에 매도한 니케이 PUT17500은 2/28 135엔, 2/28 T+1종가는 510엔이었고 미수 발생 후 반대매매 청산가는 312엔이었음. 니케이지수는 2/28 22,000에서 다음날 20,500으로 하락함.

<sup>29</sup> 예로 담보없이 대출해주고 장기간에 벌어서 버는 만큼 갚아 나가는 프로그램 등.